우암학원 창학66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269호 1판 (음력 5월 16일) 2016년 6월 20일 월요일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또 소외… '悲내리는 호남선' 철도

70조 투입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주·전남 대부분 누락

36개 신규사업 중 보성~목포 전철화 등 예산 전체 5% 수준

광주·전남이 추진하는 주요 철도 사업들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서 대부분 누락됐다. 신규사업에 포함된 광주·전남 관련 사업들도 실제로는 모두 제2차 계획(2011~2020)에서 언급된 것으로, 결국 준공시기만 늦춰지게 됐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미래 철도망 계획이 수도권, 영남권 등의 편익 증진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광주·전남의 열악한 철도망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 17일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제3차 철도망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36개 신규사업에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 등 모두 7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 등이다.

36개 신규사업 중 광주·전남에 해당하는 것은 경전선 3개 구간으로, 진주~광양 전철화(57.0km) 1524억원,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화(116.5km) 2조304억원, 보성~목포 단선전철화(82.5km) 1702억원 등이다. 향후 10년간 256km의 철도사업에 2조3530억원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36개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44조631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작 5.3%(사업비 기준) 수준이다.

게다가 이들 사업들은 모두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2011~2020)에 신규로 이미 추진이 결정된 사업들이다. 진주~광양구간은 제2차 전반기(2011~2015),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화는 후반기(2016~2020)에 착수하기로 돼 있었다. 검토사업에 포함된 광주~대구 내륙철도사업 역시 제2차 계획에서도 검토사업이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광주·전남 관련 사업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계획에서만 재탕·삼탕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제2차 계획에서 기시행사업으로 분류됐던 보성~임성리(목포) 단선철도 사업은 전철화사업으로 바뀌면서 1702억원이 증액됐다.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제3차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 목포~제주(서울~제주)간 해저고속철도(사업비 16조8000억원), 군산~목포간 서해안철도(3조5000억원) 등의 사업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2조22억원), 익산~여수 고속철도화도 제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우선 보성~목포 간 전철화사업이 포함됐다는 데 작은 성과가 있었다"며 "목포~제주간 해저터널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시켜 변경 신청을 하는 등 각 사업별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더위엔 물놀이가 최고" 더위야 물렀거라. 장마를 앞두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9일 오후 장성 홍길동테마파크 내 물분수대에서 한 어린이가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후원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 2주년

4만명에 '광주 인술' 제공

나눔·연대 대동정신 확산

광주시의원·의료인·봉사단 현지주민 등 참석 기념식 이틀간 환자 500명 진료도

지난 17일 캄보디아 캄퐁스퓨 주(州)에 위치한 광주진료소 앞 마당. 온갖 색깔로 치장된 특설무대는 전자음향과 눈부신 조명으로 가득했다.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 가까이 오를 정도로 하루 종일 찜통이었던 무더위도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태양과 함께 잦아들었다. 마당 한켠에서는 송아지 2마리가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구워지고 있는 중이었다.

현지 주민 15명 그리고 광주에서 간 의료진과 봉사단원 중 선발된 4명이 서로의 목청을 뽐내며 노래자랑을 벌였다. 선물로는 후라이팬, 선풍기, 바구니 등 생활용품이 전부였지만, 참석자들은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다.

캄보디아 노래와 한국 노래, 팝송 등이 섞여 서로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흥에 겨운 리듬에는 서로 어깨가 반응했다. 흥을 겨운 일부 주민들은 아예 무대 앞을 점령하고 춤 사위에 빠져들었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마을 잔치는 150여명의 캄퐁스퓨 주민들과 20여명의 한국 의료진·봉사단들이 서로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다.

이날 밤 마을 잔치는 그동안'한국 인술'을 제공해온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개원 2주년을 맞아 '인술' 뿐 아니라 주민과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는 주민 친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련한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사)희망나무 등이 주관하고 광주일보 후원으로 건립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동남아시아에서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전초 기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원 2주년 기념식이 지난 17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태환 광주시의 부의장과 김보현·이은방·박춘수·김용집·조세철 시의원을 비롯한 전성현·정승욱 (사)희망나무 공동대표 등 광주지역 의료인과 청소년 봉사단원이 참석했다.

광주시에서는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이 윤장현 광주시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베이 쌈낭 캄퐁스퓨 주지사와 캄보디아 보건국 관계자, 주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광주진료소 개원 2주년을 축하했다. 〈2면으로 계속〉

/캄보디아 캄퐁스퓨=최권일기자 cki@

2野, 역사교과서 공조 '국정화 금지법안' 발의

정부 고시 무력화 의지 표명

20대 국회 뜨거운 논쟁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회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4·13 총선으로 거야(巨野)가 된 두 야당이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고 원점으로 돌리고자 공조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담은 정부 고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20대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촉발될 전망이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민주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총 33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도서로 지정하게 한 조항에서 국정교과서 부분을 삭제했다.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상임위 표 대결을 불사하고라도 국정교과서를 막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 교문위에서부터 여야 간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비행기 아찔…불안한 무안공항 ▶6면
목포에 코끼리·독수리·박쥐바위 ▶11면
명동성당과 '타는목마름으로'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정부 "맞춤형 보육 7월 시행 합의"…야당 "동의 안했다"

보육료 현실화와 종일반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보육의 시행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협의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정은 맞춤형 보육의 7월 시행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야권이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다양한 보완책에 대해 여·야·정이 같이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 이날 회의 결과"라며 여야와 정부가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복지부 측의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더민주는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19일 "제2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맞춤형 보육 7월 시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권은 나아가 "제도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무작정 밀어붙인다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담은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